

2021-5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전후’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가주의’ :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이 미 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전후’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가주의’ :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이 미 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01

2021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¹⁾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최종 선정됐다.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우려되고 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당시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는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under control”임을 강조했다. 세계의 우려를 낳았던 원전 방사능 및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유일한 약점이었던 안전성 문제를 넘어가고자 한 것이다. 경쟁도시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도쿄 여름의 ‘온화한 날씨’(실제로는 평균 30도를 넘는 무더위), 그리고 손님을 극진하게 모신다는 ‘오모테나시’ 정신 등을 호소하며 도쿄는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던 디플레이션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입은 관광, 수출, 내수경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부흥올림픽’으로서 강조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관광산업효과를 포함해 약 150조엔(약 1,500조원, 2013년 다이와증권)이라는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전망 속에, 약 70%의 일본 시민은 도쿄올림픽에 찬성했다. 또한 2014년 말부터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동북부지역의 ‘부흥’을 위해 일부 경기의 예선전을 후쿠시마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물론 개최지 결정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올림픽 경기장의 방사능 문제(‘올림픽후보회장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모임’), 공공재원의 올림픽관련 시설의 우선적 배치 및 이로 인한 후쿠시마의 실질적 회복 지연,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과 개헌을 위한 ‘미디어 이벤트’, 올림픽 후의 채무 및 경기 악화 등이 우려되었으나 올림픽 추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이 2020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됨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사상 유례없는 ‘연기’를 결정하게 된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그동안 엠블럼 표절 문제, 올림픽 유치 뇌물 의혹, 마라톤 경기의 훗카이도 이전 등

1) 이 글은 2021년 9월 30일 작성되었다.

다양한 논란이 있었으나 도쿄올림픽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상한 것은 코로나였다. 1년 연기, 2년 연기, 또는 중지 등의 다양한 안이 거론되던 가운데, 2020년 3월 24일, 도쿄올림픽은 2021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사라진 2년 연기, 중지론’, 2021년 7월 2일)은 아베 신조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회장 모리 요시로와 가진 미팅에서 모리의 2년 연기 제안을 거부하고 1년 연기 안을 고집, 이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해 수락됐다고 한다. 이러한 1년 연기 주장에는 중의원총선거를 고려한 아베 신조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아베 신조는 2017년 9월 말 중의원해산 및 10월 총선거로 자민당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4년 임기인 중의원은 중도 해산이 없는 한, 2021년 10월에 총선거를 맞게 되고, 이에 앞선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도쿄올림픽은 선거를 위한 유용한 포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02

‘국민’에서 ‘국가’로 - 올림픽 ‘반대’에서 ‘개최해서 좋았다’

2021년 코로나 감염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도 늘어갔다. 2021년 1월 NHK에 의한 여론조사에서는 ‘개최해야 한다’(16%)는 의견에 비해 ‘더욱 연기해야 한다’(39%), ‘중지해야 한다’(38%)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2021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당시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7~8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산세가 꺾였으나 5월 휴가철을 전후해 다시금 확진자가 급증, 코로나 4차 유행을 겪게 된다. 5월 도쿄신문이 도쿄도 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60%가 ‘중지해야 한다’로 나왔다. 같은 시기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전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43%가 ‘중지해야 한다’, 40%가 ‘더욱 연기해야 한다’로 80% 이상이 2021년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시민 80% 이상이 개최를 반대한다는 올림픽에 대해, 일본 정부는 4차 유행 때 적용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6월 20일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장 관객수 최대 1만명 허용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올림픽 관객 허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었다. 이미 4차 유행 당시인 5월 18일, 도쿄도 내 의원 등 6천 명이 소속된 도쿄보험협회는 일본 정부에 올림픽 개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쿄도 의사회도 한 달 뒤인 6월 18일, 모리 회장이 여혐발언으로 물러난 후 새로 취임한 하시모토 세이코 회장, 도쿄도 코이케 유리코 지사 등에게 감염상황을 감안해 무관객 개최 또는 올림픽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최 2주를 남기고서도 관객의 유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 분위기를 타고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자 의료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다. 7월 8일, 도쿄도는 네 번째 긴급사태선언(7월 12일)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도쿄도 내 경기장의 ‘무관객’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나 IOC 관계자 및 스폰서 관계자의 경기장 입장 및 일반 객석에서의 관람 등에 대해, ‘관계자’의 범위 및 특별 대우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7월 23일 개회식을 전후해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7월 29일에는 1만 명을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8월 20일에는 2만 5천명 이상의 피크를 기록하게 된다.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하고 이전 정권의 계승을 앞세워 2020년 9월 수상에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는 2021년 6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 “지킬 수 없다면 올림픽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7월 이후 이러한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는 올림픽 ‘중지’라는 선택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의 신문, 방송 등의 언론도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는 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보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이미 2016년 일본의 주류 신문, 방송사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파트너십(스폰서) 계약을 맺고, 이들은 ‘더욱 좋은 대회가 되도록 선수를 응원’하고 ‘스포츠 및 일본의 경제와 사회가 약동하는 모습을 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 열기를 더하는 홍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금메달 27개를 포함, 58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 8월 9일 요미우리 신문사의 전국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일본 시민의 64%가 ‘올림픽이 개최되어 좋았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올림픽을 일본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7%였다. 불과 3개월 전 전국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개최를 반대한 도쿄올림픽은 개최 후에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만족감’을 안겨주는 대이벤트로 변모하며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올림픽 개최는 인명경시라는 ‘공기’(여론)는 일본의 금메달 러쉬로 급변할 것 - 언론의 손바닥 뒤집기는 약속’(프레지던트 온라인, 2021년 5월 31일)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이미 개최 전부터 언론의 ‘손바닥 뒤집기’와 더불어 개최 후의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다.

03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올림픽 ‘중지’는 고려사항이 아님을 강조해 왔다. 올림픽 역사상 ‘중지’는 5번이나 있었으나 ‘연기’가 없었던 점에서, 일본 정부의 2021년으로의 ‘연기’ 선택은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급격한 코로나 확산, 의료시설 압박, 사망자 증가 등이 예견되었으며 수차례 정부에 전달되었다. 또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올림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올림픽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토록 올림픽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일본 언론 및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IOC를 거론한다. 올림픽 중지는 일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IOC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팬데믹 유행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IOC와의 계약에 따라 전 세계 스포츠인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호주 선수팀이 선수촌에 내건 ‘Thank you’ 현수막은 일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외국 선수단이 일본에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 언론 및 소셜미디어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IOC는 전쟁이나 내란 등 ‘올림픽 참가자의 안전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전문 취재기자인 고토 이츠다로에 따르면(비디오뉴스닷컴, 2021년 5월 8일), IOC는 개최지와 계약상 관객유무 등과 관계없이 TV방영권료가 확보되면 충분히 수익을 보는 구조다. 그리고 이미 2032년까지 미국 NBC와의 계약으로 수익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참가만 하면, 즉 미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이 가능하기만 하면, 올림픽이 언제 열리든, 어떤 형태가 되든 올림픽은 비즈니스로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로나 유행 초기 중지론이나 2년 연기론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는 와중에 2년 연기 제안을 거부하고 1년 연기 결정을 고집하고 추진한 주체는 다름 아닌 일본 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대 공공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고토 기자에 따르면, 2013년 올림픽 유치 당시 7천 3백억엔 정도로 잡은 지출 경비는 그사이 다양한 명목으로 1조 6천억엔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1조엔 가까운 적자는 도쿄도나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비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는 3조엔이 넘는 재정부담을 받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개최 2주 전까지도 관객 유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림픽 개최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도시락 수천 톤이 매일 그대로 버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관객 방침으로 인해 관람객 유도와 관련된 일을 맡기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그 인원만큼의 도시락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어진’ 도시락이 매일 정량으로 만들어진 뒤 그대로 버려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 관련 건설업자, 광고홍보업자, 서비스업자 등 다양한 이권그룹이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와의 개인적·공적 관계 속에서 인건비 등을 최대한 부풀려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적자 발생시 ‘결국은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인식 속에 소위 ‘도덕적 해이’가 횡행했던 것이다. 이렇듯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유관객 방침을 끝까지 고민하던 정부가 수천 톤의 공적 자금이 그대로 버려지는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쿄올림픽이라는 거대 공적자금 프로젝트에 정계, 재계의 다양한 이권그룹이 모여들고, 여기에 주요 언론사들이 올림픽 스폰서로 가세했다. 주요 언론사들은 올림픽이 다가오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감동’과 ‘만족’을 제공하면서, 올림픽 배후의 거대 이권구조, ‘도덕적 해이’ 속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미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아베 정권에서의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한 ‘박스’ 프로젝트(재해재난 및 올림픽 등에서의 박스침대 제공 등)에 대하여 아베 신조의 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미츠비시상사의 파케징사 사장인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에서는 공적자금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주요 언론사에 의한 심층취재 및 보도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올림픽을 둘러싼 거대 이권구조가 공적 부담을 늘리면서 부당 이득을 더 취할 수도 있을 2022년이 아닌, 2021년 개최를 고집한 것은 이러한 이권구조를 2022년 또는 그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팬데믹 상황 속의 불만을 잠재우고 2021년 10월의 중의원총선에서 자민당이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초점이었던 것이다.

04

‘전후’ 극복을 향한
‘국민’ 없는 ‘국가주의’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일본 민주주의의 전망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민당 정권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권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존재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무엇보다 ‘개헌’을 목표로 내건 정권으로, 2012년 공개된 ‘일본국헌법개정초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의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금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이 없어지고, 일왕(천황)을 국가 원수로 한다는 조항이나, 국방군 설치 및 안전보장에서의 자위권 확대, 초법적형태의 긴급사태선언 조항 등 여러 논란을 낳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있다. 국민의 ‘개인’으로서의 측면(제13조²⁾)이 삭제되고, 공익 및 국가 질서를 해하는 목적의 활동 및 이를 위한 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개정안 제21조 제2항³⁾)는 점이나 통치기구에 대한 의무와 제한을 두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개정안 102조 헌법존중옹호의무)는 조항을 둔 점 등에서 자민당 정권이 주권자인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자민당 헌법개정안에는 현존하는 제9조 전쟁방기를 중심으로 한 ‘전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강한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메이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은 ‘전쟁’에 의한 피해와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한 나라로서 일본 국민은 국가와 향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수상)을 최고지휘관으로 둔 국방군을 통해 국제적 안전보장 틀 속 ‘정상국가’로서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패전으로 부과된 ‘전후’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헌이

2) 현행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을 사람으로 바꾸고, ‘공익 및 국가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바꾸었다.

3) 개정안 제21조 제2항은 현행 헌법에는 없는 추가된 항목이다. 현행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항목으로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2항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공익 및 국가 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추가한 것이다.

필수적이며, 이러한 개헌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급하면서도, 언론을 이권구조 속에 포함해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권력감시와 비판적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국가주의'에 동의·동참하는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예견된 대로 '개최해서 좋았다'는 감동 스토리로 끝났다. 올림픽 직후 의료 붕괴로 인해 자택에서 사망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이를 언론에서도 일부 다루기도 했지만, 9월 후반에 접어들어 확진자 수도 피크 때의 2만 5천 명대와 비교해 2천 2~3백 명대로 10배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9월 말 아베 세력이 지원하는 기시다 후미오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10월 중의원총선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헌법개정'을 내건 아베는 임기 내 헌법개정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자민당이 도쿄올림픽이라는 거대 이벤트를 발판으로 2021년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드라이브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이슈는 일본 국민들을 자민당의 '국가주의'로 규합시키는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는 일본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및 글로벌 민주주의의 전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전후’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가주의’ :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발행일 2021년 10월 23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